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0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5월 8일 (음력 4월 4일) 수요일

## “美정부 5·18 기밀문서 완전 공개해야”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위해 미국이 5·18 관련 기밀문서를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연구원은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최용주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철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브라질 등의 과거사 청산작업에 상당 부분 미국 측이 제공한 기밀문서에 의존했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도 완전한 형태의 기밀 해제 및 우리 측이 요구하는 신규 문서의 추가적

민주평화연구원 국회서 진상규명 쟁점 토론회

최용주 연구위원 “진실재판 도입도 검토해야”

기밀 해제를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은 “현행의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조사는 법적 강제력이 제한돼 있어서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운영했던

‘진실재판’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은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나무축제의 참뎡

3년 연속 문화관광 분야 국내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전남 담양대나무축제가 옛새 간의 화려한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담양군이 7일 밝혔다. 축제 현장 모습.

“역사적 사실의 부인이란 전시 또는 평시를 막론하고 권위주의적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집단살해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라며 “역사적 사실인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에 대해 홀로코스트 부인을 형사처벌하는 독일 형법의 대증선동죄와 유사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는 “1980년 5월 계엄군이 광주를 고립시키면서 냉전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를 동원해 광주의 진상을 체계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했다”며 “계엄군이 활용한 심리전은 항쟁 지도부와 일반 시민, 광주와 여타 지역의 주민을 분리시키려는 이중적인 것이었고, 이것은 광주와 전라도 지역을 폭도나 과격한 반체제적 성향을 지닌 지역으로 이미지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학예연구사는 “폭도 담론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신군부의 낙인 효과가 지역 차별과 반공 이데올로기의 유산과 맞물린 데 따른 것이다”며 “지역과 세대의 측면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하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민지 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팀장은 “수구 언론은 여전히 5·18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거나 훼손하는 걸 방조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5·18민주화운동은 또다시 유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꿈 있으면 5·18 광주항쟁 30주기, 내년이면 40주기를 맞이하지만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속히 정상화해 5·18의 최종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전문 감도는 ‘미레’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안철수·유승민계간 갈등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을 주축으로 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강행에 반발해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인 것에 대해, 다른 한 축인 옛 국민의당의 안철수계도 사실상 이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특히 갈등의 향방을 평가할 때 7번으로 꼽히는 권은희 의원이 김관영 원내대표를 찾아 자신의 정책위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을 동반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등 안철수계 사이에서도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원내지도부로서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에서 비롯된 분열의 양상을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 = 뉴시스



## 전남도, 구례 지리산정원 국내 첫 숲 정원으로 조성한다

전남도가 국내 처음으로 숲 정원 조성을 추진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리산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국내 첫 숲 정원을 조성해 정원문화 선도와 지역 관광, 정원산업 활성화로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숲정원은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일원에

있는 지리산정원에 조성된다.

터 시작해 ‘가족(Family), 더불어 함께

정원문화 선도·지역 관광·정원산업 활성화로 도민 소득증대 기여

산동면 이평리 일원 13.4ha 규모 총 90억원 투입 2022년 개장 목표

13.4ha 규모로 총 90억원을 들여 올해부 (With, 휴식(Rest)을 테마로 소나무숲 정

원 등을 2022년 5월 개장한다는 목표다.

지난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시설계약에 착수했다.

앞으로 일본 북해도 정원가도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등을 방문해 선진지 벤치마킹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6월 중 전문가와 도민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8월 기본 및 실시시설 계약 중간보고회,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기반조성과 함께, 2021년 건축 및 식물 식재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백이 있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 MBC 월화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중 >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공공노동자의

#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립니다



공공연맹은 이런 일을 합니다.

● 공공기관 노조를 대표해 정부부처와의 노정협의를 진행합니다. ★★★★★

※ 2019년 노정협의 주요 안건: 노동이사제 도입, 경영평가제도 개선,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폐기 등

● 지방정부와의 노사정협의를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 서울시, 대구시 등 노사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 노조들의 현안해결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지원합니다.

● 2018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 지방정부 건설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연맹은 5만 명의 공공부문노동자가 함께 합니다.

국공공 한국농어촌공사노조,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기관노조 주택관리공단노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조, 도로교통공단노조 등 30여개

지방공공 대구도시공사노조, 인천도시공사노조, 대구도시철도노조, 기관노조 부산관광공사노조, 부산환경공단노조, 경기도시공사노조 등 50여개

공무직 노조 경찰청주무관노조, 전국통계청노조, 농림축산식품부노조, 국토교통부공무직노조, 충북도청 공무직노조 등 20여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조직가입상담

문의 | 02-6277-2280 이메일 | fkp00@gmail.com 홈페이지 | www.publicunion.or.kr